

# 조선어학회와 《신민》

정 승 철\*

## I. 머리말

조선어학회는 1921년에 결성된 단체로, 국어 연구 및 국어 운동을 위한 몇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다.<sup>1)</sup> 권덕규(1890~1950), 신명균(1889~1941), 임경재(1876~1955), 장지영(1887~1976), 최두선(1894~1974) 등 주시경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우리말과 글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한 사회 계몽을 목적으로 이 단체를 결성하였다.

1920년대 후반, 조선어학회는 모임을 전국 규모로 점차 확장해 가면서 어문 정리를 위한 제반 연구 활동 및 보급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sup>2)</sup> 그리하여 1929년에는 학회 내에 ‘조선어사전편찬회’를 두어 국어사전 간행을 위한 편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1930년에 ‘한글 표기법 통일’, ‘표준어 사정’, ‘외래어 표기법 통일’ 등 어문 규정의 확립을 결의한 뒤 여러 차례의

---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창립 당시의 학회 이름은 ‘조선어연구회’였다. 1931년에 학회명이 ‘조선어학회’로 바뀌었지만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조선어학회’란 이름을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한다.

2) 이 학회의 기관지는 《한글》이다. 이 잡지는 1927년 2월에 동인지의 성격을 띠고 출간되었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고 이듬해 10월, 통권 9호를 내고 폐간하였다. 그 이후 1932년 5월에 학술잡지로서의 《한글》이 다시 발간되었으나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원 다수가 검거되면서 간행이 중단되었다.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마지막 호는 1942년 5월에 나온 통권 93호였다(광복 후, 1946년 4월에 속간).

수정 작업을 거쳐 1933년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6년에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그리고 1940년에는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훗날, 이 단체의 중심 회원들이 모두 일제에 피검되는 ‘조선어학회 사건’(1942년)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조선어학회의 ‘어문 정리’ 활동이 일제에 의해 ‘민족 독립 운동’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sup>3)</sup> 이러한 차원에서 조선어학회는, 학회 창립 때부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학회 활동이 중단될 때까지 일본 제국주위에 대응해 사회 운동을 벌인 민족 계몽 단체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민》은 1925년에서 1933년까지 발행된 사회 계몽을 위한 종합 잡지로, 이 시기에 조선총독부의 공식 출판 허가를 받은 ‘유일한’ 잡지였다(이경돈 2011: 275). 이 잡지는 당시 한국 사회의 민중 계몽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주 독자층을 지방의 관리 및 지식층 인사들에 두어 그들에게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상세히 전달하는 역할도 더불어 담당하였다.

이러한 《신민》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1926년에서 1929년 사이에 권덕규, 신명균, 이병기(1891~1968), 이윤재(1888~1943), 장지영, 정열모(1895~1967), 최현배(1894~1970) 등 조선어학회의 중심인물들이<sup>4)</sup> 이 잡지에 원고를 적극적으로 투고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이들이 쓴 글의 게재 현황을 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5)</sup>

- 
- 3) 조선어학회 사건을 조선총독부의 태도 변화(즉 조선어학회의 어문 정리 작업을 체제 내적으로 허용하다가 일제의 한국 지배에 맞서는 행위로 규정된 태도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미쓰이(2013: 248-286) 참조.
  - 4) 조선어학회의 주요 인물로 이극로(1893~1978)와 이희승(1896~1989)은 이들 인사들과 학회 활동 시기가 좀 달랐다. 이극로는 1929년 10월 이후부터 조선어사전 편찬위원으로 학회 활동을 하였고, 이희승은 1930년 경성제대 졸업 이후에 조선어학회의 정회원이 되었다.
  - 5) 이해의 편의를 위해, 글의 제목을 현행 맞춤법 규정(띄어쓰기 포함)에 맞게 수정하였다. 아울러 한자도 가급적 한글로 바꾸어 표기하였다(이하 동일). 이는 《신민》의 원문을 인용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게재연도	편수	어문 관련 논설 제목
권덕규	1926.3~ 1928.1	4	〈정음 반포 이후의 概歷〉(13호), 〈대명절로의 가 가날을 정하자〉(19호), 〈훈민정음의 연혁〉(20호), 〈우리글의 명칭으로부터 품사를 나누기 처음까 지〉(52호)
신명균	1929.8	1	〈철자법 문제의 이론과 실제〉(52호)
이병기	1926.3~ 1928.1	3	〈한자의 음〉(13호), 〈정음 사용으로 활자 개량에 까지〉(19호), 〈수습 개정은 정리의 초보〉(52호)
이윤재	1926.3~ 1926.11	2	〈조선글은 조선적으로〉(13호), 〈朝鮮文과 語의 강 습을 실행하자〉(19호)
장지영	1929.8	1	〈조선어 철자법 개정에 대하여〉(52호)
정열모	1926.3~ 1929.8	4	〈정음 반포 8회갑을 당하여〉(13호), 〈우리글 보급 은 교육으로부터〉(19호), 〈문화상으로 본 우리말〉 (20호), 〈한글 철자 원리에 대하여〉(52호)
최현배	1926.12	1	〈정음 字體 개량론〉(20호)
계		16	

위 표에서 보듯 1926년 3월(13호)에서 1929년 8월(52호)까지 3년 6개월  
간, 총 16편의 어문 관련 논설을 이 잡지에 싣고 있는 것이다.<sup>6)</sup> 동일한 시  
기에 나온 다른 잡지와 비교하면 《신민》에 게재된 어문 논설의 총 편수는  
가히 압도적이라 할 만하다.<sup>7)</sup>

6) 이 이외에 권덕규는 〈정사 자체로 보면 신성할지 모르나〉(17호), 〈신시형 발견의  
경로〉(23호), 〈나의 십년 계획〉(33호) 등 3편, 이병기는 〈무엇이든 정성스럽게 하  
자〉(23호), 〈(시) 봄의 서울〉(25호), 〈(사설시조) 야시, 두검뒤지기〉(29호), 〈(시조)  
가을, 사랑하는 XX에게〉(30호), 〈(시) 겨울 새벽〉(45호), 〈대중의 기대에 副하  
라〉(58호), 〈남량 음악〉(60호) 등 7편, 이윤재는 〈세계 사조와 국민문학〉(23호) 1  
편, 정열모는 〈민권 신장과 私心 응징〉(58호), 〈이론보담 실제의 경험음〉(60호) 등  
2편의 글을 더 실었다. 여기에다 어문 관련 글을 모두 합치면 이 잡지에는, 1926  
년 3월(13호)에서 1930년 8월(60호)까지 4년 6개월간 조선어학회 인사들의 글이  
무려 29편이나 실린 셈이다.

7) 아래의 표는 《역대한국문법대계》 3-23(〈한글 논쟁 논설집〉 하권)에 실린 글만을  
대상으로 거칠게 작성되었다. 그러한 까닭에 1927년 2월에서 1928년 10월까지 발

잡지명	신생 <sup>8)</sup>	별건곤	동광	한빛	문에 공론	학생	조선 문단	현대 평론
편수	7	6	4	3	2	2	1	1

위 두 표의 비교는 조선어학회가 《신민》의 간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준다. 게재 지면이 부족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특정 시기의 특정 잡지에 이렇게 많은 글을 실은 것은 확실히, 어떤 공통된 목적 아래 이루어진 의도적 집단행동으로 이해된다. 아마도 이는, 이른바 ‘철자법 논쟁’에서 조선어학회 철자법안의 사회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의 유력 잡지 《신민》에 회원들의 어학적 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그럼으로써 조선어학회는 추후, 조선총독부가 ‘언문철자법(1930)’을 제정할 때 자신들의 철자법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 II. 《신민》 개요

《신민》은 지방의 지식인을 주 독자층으로 하고 정관계 및 문화계의 유력 인사들을 필자로 하여 1925년 5월에 창간, 1933년까지 발행된 월간 종합잡지다.<sup>9)</sup> 이는 조선총독부의 신문지법으로 발행 허가를 받은 “1920년대 중반 이후의 유일한 잡지”(이경돈 2011: 275)였는데<sup>10)</sup> 이러한 특혜는, 일제

행된 동인지 《한글》이 전체 통계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8) 《역대한국문법대계》 3-23에 따르면 《新生》은 1928년 10월에 창간된 것과 1929년 1월에 창간된 것 두 계열이 있다. 여기서의 편수는 전자의 《신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7편 중에 《신생》 2호(1928.11, ‘483회 훈민정음 반포기념호’이자 ‘주시경 선생 15주기 기념 특집호’)에만 6편이 실렸다.

9) 《신민》의 경우, 1933년 4월에 ‘일미 전쟁 예상호’로 발행된 80호(연세대 학술정보원 소장)가 현재까지 알려진 최종호다. 하지만 이 잡지를 발행한 신민사는 그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80호가 최종호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이경돈 2011: 304).

10)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출간된 잡지들은 이종의 통제 장치(원고 검열과 納本 검

강점기의 대표적 관료의 한 사람이었던 이각중(1888~1968)이<sup>11)</sup> 이 잡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었다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성싶다.

이러한 《신민》은 지방의 지식인 즉 ‘公民’을 주 독자층으로 하였다. 이때의 ‘공민’은 지방 행정에 참여하는 ‘관료’, 향촌 사회의 자치와 기본 교양 교육을 책임지는 ‘유림’ 그리고 각종 산업에 종사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지방의 ‘농민’과 ‘상공인’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었다(이경돈 2011: 289). 그리하여 《신민》에는, 총독부의 정책과 각 지방의 행정 및 경제 사정을 이들 지방 공민들에게 알려 주는 각종 관련 자료들과 논설이 수시로 게재되었던 것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창간호의 목차만을 봐도 이러한 경향을 쉬 확인할 수 있다.

- (1) 《신민》 창간호(1925. 5. 10)
- 이각중, 〈신흥 민족의 初發心〉
  - 유일선, 〈永遠의 打算〉
  - 선우전, 〈우리의 경제 노력은 아직 빈약하다〉
  - 신흥우, 〈농촌사회 사업에 대하여〉
  - 이범승, 〈농민 보충 교육의 필요〉
  - 홍순재, 〈향촌 청년에게 고함〉
  - 홍승균, 〈지방 교화와 유림〉
  - 최창현, 〈생활 개선의 안목〉

---

열)를 둔 ‘출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신문지법은, 이에서 원고 검열을 제외하여 다소 완화된 일제 강점기의 정기간행물법이었다(정진석 2014: 46-48).

- 11) 이각중은 관립한성고등학교(1904~1909, 현재의 경기고등학교)와 보성전문학교 법률과(1906~1908, 夜學)를 졸업하고 1909년 일본 와세다 대학 文學科에 입학하였다. 일제의 강점 후 조선총독부 관리가 되는데 일제 강점기 내내 총독부 및 관련 조직에서 근무하였다. 이 시기 동안 그가 맡았던 주요 관직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 내무부 학무국 편집과/학무과 속(1911~1917), 김포군수(1917~1920), 조선총독부 내무국(1921~1930) 및 학무국 촉탁(1930~1939),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이사(1938~1940) 및 국민총력 조선연맹 참사(1940~1945) 등. 광복 후에 이각중은 1949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체포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정신이상’ 증세로 석방되었다. 그는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총독부가 식민지 시기의 한국인들에게 암송하게 했던 ‘황국 신민의 맹세’(皇國臣民ノ誓詞, 1937)의 문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 白洲生, 〈조선인의 생활 문제를 들어 治者の 反省을 促함〉
- 松仙, 〈조선 민중 정치의 확립을 唱하노라: 지방 공직자의 각성을 바랍〉
- 望洋生, 〈公民의 벗으로〉
- 大塚常三郎, 〈新民에 與함〉

[政局 만평]

[조사와 연구 총독부 식산국, 〈토지개량사업 기본조사〉 외 4편<sup>12)</sup>

이 잡지는 창간 후 불과 1년 만에 급성장하여 《조선일보》(1920. 3. 5~1940. 8. 10), 《동아일보》(1920. 4. 1~1940. 8. 10) 등의 일간 신문이나 월간 잡지 《개벽》(1920. 6. 25~1926. 8. 1) 등 당대의 우수한 언론 매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당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단기간에 유력 잡지로 자리매김한 《신민》은 그 시기의 한국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의 당면 과제로 “실제 생활 개선”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경돈 2011: 292)

- (2) 우리는 우선 먹고원문: 먹재 살고야 보자. 우리는 樂天者도 아니고 厭世者도 아니다. 다못 우리의 수족을 놀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실제 생활 문제를 해결하여 보자. 이제 우리는 경제적 고통이 今日같이 심함이 없으며 생활의 困乏이 今日같이 절박함이 없나니 이렇고 軍資의 強請이 무슨 권위가 있으며 日鮮 勸說의 勸說이 무슨 감격이 있을까? ‘공자왈’이 무엇이며 ‘맹자왈’이 무엇이며 ‘월선왈’이 무엇이며 ‘레닌왈’이 무엇인가? 그는 다 살고 본 연후의 일이 아닌가. 조선 사람같이 생활 의식이 박약함이 없었으며 조선 사람같이 生의 노력이 결핍함은 없나니 今의 경제난, 생활고는 태반이나 우리의 自招임을 우선 悔悟하자. 아직도 ‘직업’을 卑事라 하며 ‘노동’을 賤役이라 하며 ‘검약’을 인색자라 하며 ‘근면’을 저능이라 하는가(이각중, 〈신흥 민족의 初發心〉, 《신민》 창간호, 3면).

위 인용문에서 보듯, 《신민》은 일제강점기의 “경제난, 생활고”가 ‘육체 노동’을 천시하는 우리의 민족성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러한 생활의 곤궁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족의식 및 생활의식의 개조와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일제의 체제 내적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12) 이하에 있는 ‘국제 질서, 수필, 동화, 시’ 등은 목차 제시에서 생략하였다.

일을 《신민》이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신민》은 당시의 언론 매체가 크게 주목하지 않던 지방의 ‘공민’을 대상으로 ‘실제 생활의 개선’을 최우선의 현안으로 제시하면서 당시 한국 사회의 여론을 대변하는 유력 잡지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신민》은 조선어학회와 목적을 공유할 여지가 충분하였다. 어문의 정리는 실제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지방민들의 문자 생활을 위해 철자법의 통일과 보급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신민》에서는 1926년에 세 번 그리고 1929년에 한 번, 총 네 번에 걸쳐 조선어학회 인사들을 주 필자로 하여 어문 관련 특집호를 발간하게 된다. 특집 관련 글의 목록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3) 《신민》 13호(1926, 5)
- 정열모, 〈정음 반포 8회갑을 당하여〉
  - 이병도, 〈세종대왕의 위업 일반〉
  - 이윤재, 〈조선글은 조선적으로〉
  - 한별,<sup>13)</sup> 〈정음 반포 이후의 概歷〉
  - 사공환, 〈조선문의 史的 연구〉
  - 안자산,<sup>14)</sup> 〈언문 발생 전후의 기록법〉
  - 이병기, 〈한자의 음〉
  - 최남선, 〈주시경 선생전〉
- [雜組] 세종대왕 어제 훈민정음
- (4) 《신민》 19호(1926, 11)
- 김영진, 〈정음 반포 기념일을 당하여〉
  - 우리 문자의 보급책
    - 권덕규, 〈대명절로의 가가날을 정하자〉
    - 안재홍, 〈교육 용어와 농촌 보급이 필요〉
    - 이윤재, 〈朝鮮文과 語의 강습을 실행하자〉
    - 이병기, 〈정음 사용으로 활자 개량에까지〉
    - 이병도, 〈의미 깊은 기념일을 영원히 지키자〉
    - 송진우, 〈최선의 노력과 방법을 강구하자〉
    - 민태원, 〈반만년 문화사상으로 보아〉
    - 이광수, 〈조선 문헌의 수집 간행도 亦一方法〉

13) ‘한별’은 권덕규의 호다.

14) ‘자산’은 안확(1886~1946)의 호다.

- 이서구, 〈교육적으로, 대중적으로〉
- 정열모, 〈우리글 보급은 교육으로부터〉
- (5) 《신민》 20호(1926, 12)
  - 유일선, 〈조선문 연구의 통속적 고찰: 훈민정음 반포 기념에 대하여〉
  - 훈민정음 반포 기념 강연록
    - 정열모, 〈문화상으로 본 우리말〉
    - 권덕규, 〈훈민정음의 연혁〉
    - 어윤적, 〈정음의 史的 고찰〉
    - 최현배, 〈정음 字體 개량론: 횡서를 제창하노라〉

(3)~(5)는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 기념 및 한글날(1926년에는 ‘가갸날’) 제정과 관련한 특집들이다. ‘훈민정음’은 주시경(1876~1914) 및 조선어학회 인사들의 표음주의 문자관<sup>15)</sup>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된 상징물이고 ‘한글날’ 제정은 조선어학회가 벌인 사회 운동의 중요한 산물이므로 이로부터 《신민》의 간행에 조선어학회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위의 특집들은 두 단체가 한글 보급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신민》 측은 지방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데, 그리고 조선어학회 측은 거기에 더하여 자신들의 철자법을 전국적으로 널리 소개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한글 관련 특집호를 여러 차례 공동으로 발행하게 되었으리라는 말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1929년에 나온 ‘언문철자법(1930)’ 제정을 위한 특집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III. 언문철자법과 《신민》

조선총독부의 언문철자법은 1912년, 1921년, 1930년 세 차례에 걸쳐 공포되었다.<sup>16)</sup> 1912년과 1921년의 언문철자법은 한자음의 전통적 표기와 7중성

15) 표음주의 문자관은, 표음문자는 읽으면 곧 말이 되므로 언문일치의 면에서 표의 문자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는 관점을 가리킨다(정승철 2005: 83). 이러한 문자관은 주시경 학과 나아가 조선어학회가 내세운 철자법 이론의 바탕을 이룬다.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및 ‘ㄹ, ㅍ, ㅌ’의 자음군 표기 그리고 ‘ㅅ, ㅆ, ㅈ, ㅊ’의 된시옷 표기 등 전통적 표기 관습을 규정화했다는 점에서 1930년의 언문철자법과 가장 크게 구별된다(정승철 2007: 79).

주요 규정	언문철자법			비고
	1912년	1921년	1930년	
발음대로 표기	△	△	○	△: 한자음 제외
‘ㅌ, ㅊ’ 등의 받침 사용	×	×	○	
‘ㄱ, ㄷ’ 등의 각자병서 사용	×	×	○	

이로써 보면 언문철자법은 종전의 관습을 따르던 규정(1912년과 1921년)에서 조선어학회의 철자 원칙을 대부분 수용한 규정(1930년)으로 전면 개정되는 변화를<sup>17)</sup> 겪은 셈이다. 특히 1930년의 개정에서는 철자 원칙의 상당한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복잡한 의견 조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학무국)에서는 ‘언문철자법(1930)’의 제정을 위해 세 차례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로서 철자법 시안을 만들었다(각각의 시안을 ‘基礎案, 原案, 折衷案’이라 불렀다). 각 시안의 작성 과정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8)</sup>

기간	작성 및 검토 위원	작성 시안
1928.9	현현(학무국 편수관), 이원규(학무국 편수서기), 田島泰秀(학무국 편수서기) <sup>19)</sup>	기초안
1928.9~1929.1	박승두(수송공립보통학교 교원), 박영빈(제2고보 <sup>20)</sup> 교원), 심의린(경성사범부속보통학교 교원), 이세정(진명여고보 교원)	원안

16) 1912년과 1921년에는 보통학교(현재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이었으나 1930년에 ‘언문철자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모든 인쇄물을 대상으로 한 철자법 규정이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언문철자법’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1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申昌淳(2003: 265-323) 참조.

18) ‘언문철자법(1930)’ 제정 과정에 대한 상세는 三ツ井崇(2001: 78-87) 참조.

기간	작성 및 검토 위원	작성 시안
1929.5~ 1929.7	권덕규(중앙고보 교원), 김상희(매일신보 편집국장), 신명균(조선교육협회 이사), 심의린, 이세정, 이완웅(조선어연구회 회장), 장지영(조선일보 지방부장), 정열모(중등학교 교원), 최현배(연희전문학교 교수), 小倉進平(경성제대 교수), 高橋亨(경성제대 교수), 藤波義貫(통역관), 西村眞太郎(통역관), 田中徳太郎(통역관)	절충안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마련된 ‘절충안’은<sup>21)</sup>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하여 이를 최종안으로 총독부의 자문기관인 ‘중추원’의 심의(1930년 2월 5일과 12일)에 부쳐졌으나 별다른 수정 없이 최종 승인을 얻어 총독부의 공식 표기 규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러한 논란 과정에서, 언문 철자법 개정을 위한 특집으로 《신민》 52호가 ‘한글 問題號’라는 별도의 제목이 붙어 간행된다. 이 특집호에 수록된 철자법 관련 글만을 모아 차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신민》 52호(1929. 8)

[권두언 철자법 개정 문제에 대하여]

- 신명균, 〈철자법 문제의 이론과 실제〉
- 장지영, 〈조선어 철자법 개정에 대하여〉
- 편집실, 〈조선어 철자법 개정 原案〉
- 철자법 개정 原案 비평
  - 정열모, 〈한글 철자 원리에 대하여〉
  - 이병기, 〈今般 개정은 정리의 초보〉
  - 최남신, 〈學理에도 실제에도 불합〉
  - 문일평, 〈한글 논의에 대하여〉
  - 염상섭, 〈간편한 활용주의를 바랍니다〉
  - 이광수, 〈내가 보는 바로서는〉

19) ‘원안’ 및 ‘절충안’의 실제 작성자도 이 학무국 위원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20) ‘고보’는 ‘고등보통학교’를 가리킨다(‘제2고보’는 현재의 ‘경북고등학교’).

21) 이는 《매일신보》(1930. 2. 8-14)와 《동아일보》(1930. 2. 8-13)에 게재되었는데 그 명칭이 전자에는 ‘改正 折衷案’, 후자에는 ‘改正案’으로 되어 있다(정승철 2007: 73). 이 시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니므로 ‘개정안’보다 ‘절충안’이 더 적절한 용어로 판단된다.

- 이완응, 〈간편주의를 주장함〉
- 이은상, 〈한글의 3문제〉
- 柳光烈, 〈상식적 판단〉
- 이원규, 〈조선문 철자법 조사에 관한 경과 및 정리에 대한 私見〉

책의 제호로 ‘한글’이란 명칭을 사용한 데에서 알 수 있듯, 이 특집호에서는 조선어학회의 철자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sup>22)</sup>

- (7) 이 개정안의 이상으로는 학적으로 合理하고 실제로 간편함을 꾀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그러면 학적 합리란 무엇이나? 그것은 물론 언어학, 성음학, 문법학에 적합할 것을 말함이오. 실제 간편이란 무엇이나? 그것은 학습, 사용, 인쇄에 兼便함을 의미함이다. 그러나 吾人は 이 위에 다시 두 가지의 중대한 부수 조건을 첨가코자 하는 자이니 그것은 곧 한문 전폐, 橫書 실행을 예상치 않고는 또한 완전한 理想案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 한자음을 表音式으로 할 것, 초성 並書로 할 것, 초성 전부를 종성으로 사용할 것, 현대 경성어를 표준으로 할 것의 4항에는 누구나 다시 이의를 붙을 여지가 없이 명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두언〉, 《신민》 52호, 1면)

위의 〈권두언〉에서는 한자 폐지와 橫書 실행을 전제로 하면서<sup>23)</sup> ‘조선문 철자법’의 주요 원칙으로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들고, 미래를 위해 ‘부득이’ 하게 이러한 원칙에 따라 철자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1) 한자음은 “表音式”, 즉 소리 나는 대로 쓸 것 (2) 초성은 “並書” 즉 ‘ㄱ, ㄷ, ㅃ, ㅆ, ㅈ’으로 쓸 것 (3) 초성 모두를 종성으로 쓸 것, 즉 ‘ㄱ, ㄷ, ㅌ, ㅍ, ㅊ, ㅋ, ㆁ’ 등 거의 모든 받침을 허용할 것 (4) 서울말을 표준

22) 그러한 까닭에 이완응(1887~1949)은 다음과 같이 《신민》의 편집자에게 항의한다; 貴誌 8월호를 ‘한글 問題號’라 하여 특히 문제 많은 언문철자법 개정에 공헌코자 하시는 盛意를 감사하오며 다만 ‘한글 問題號’라는 ‘한글’ 云云은 貴誌의 공평한 처지로 見하여 ‘언문철자법’ 혹은 ‘조선문 철자법’ 云云이 적당치 아니하올는지. (《신민》 52호, 71면)

23) ‘橫서’, 즉 가로쓰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권두언〉의 필자는 ‘최현배’로 추정된다. 최현배는 조선어학회 인사들 중에 한글의 ‘가로쓰기’를 일찍(1920년대 초)부터 줄곧 주창한 인물이다. 그는 《신민》 20호(1926. 12)에도 ‘橫서’의 필요성을 언급한 글(〈정음 字體 개량론: 橫서를 제창하노라〉)을 게재한 바 있다.

어로 할 것.

이 네 항목은 조선어학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철자법의 기본 원칙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미 〈권두언〉에서부터 조선어학회의 철자법안이 《신민》의 입장임을 천명하고 ‘언문철자법(1930)’에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해당 잡지에 실린 다른 논설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철자법 개정 原案 비평’란에서는 철자법 개정에 관한 ‘설문’ 참여자 9명의 응답 내용을 공개하였다. 그 결과만을 놓고 보면 조선어학회의 철자 원칙에 대해 찬성이 6명(‘정영모, 이병기, 문일평, 이광수, 이은상, 유광열’), 반대가 3명(‘최남선, 염상섭, 이완웅’)이므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다. 《신민》의 편집 방침을 감안할 때<sup>24)</sup> 이는 조선어학회 철자법안에 대해 《신민》의 편집 방향이 이미 ‘찬성’ 쪽에 두어져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철자법에 관한 한 《신민》은 조선어학회와 같은 태도를 지녔다고 하겠다. 이로써 보면 조선어학회는 《신민》을 통해 자신들의 철자 원칙을 공식화하고 이를 지방의 공직자 및 지식인들에게 두루 보급하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적으로 ‘잡지’의 영역에서 조선어학회의 철자법안을 공고히 하는 한편, 《신민》을 매개로 정관계 및 문화계의 유력인 필자 그리고 지방의 지식인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리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조선어학회의 이와 같은 활동들이 훗날, ‘언문철자법(1930)’을 제정할 때 학회 인사들이 조사위원으로 대거 참여하게<sup>25)</sup> 되는 계기를 마련

24) 이정돈(2011: 297-301)은 《신민》이 가지는 체제상의 중요한 특징으로 ‘설문’ 형식의 도입을 들고 《신민》을 “편집권을 적극 활용”하여 “계몽 여론” 혹은 “교화 여론”을 추구한 잡지로 규정하였다. 여론 수렴을 위해 ‘설문’란을 두었으면서도 자신과 다른 편에 서는 필자들의 수를 항상 적게 하여 《신민》의 편집 방향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절하고 그럼으로써 일반 여론을 자신들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한 잡지였다는 말이다.

25) 그 결과, 조선총독부는 조선어학회의 철자 원칙을 대부분 받아들여 ‘언문철자법(1930)’을 제정하게 된다. 앞서 서술했듯 1912년/1921년의 언문철자법과 1930년

해 준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신민》의 간행을 위해 들인 조선어학회의 정성과 노력이 결과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언문철자법(1930)’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아닐까?

#### IV. 언문철자법(1930)과 조선어학회

언문철자법 제정을 위한 ‘조사위원회’(1929. 5~7)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해 《매일신보》는 다음과 같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게재한다.<sup>26)</sup>

- (8) 조사위원회 개최 당시에 그 원안 일부가 세간에 누설되어 각 방면에 多大한 衝動을 준 바 있으며 또 頃者에 이르러서는 조사위원 중 일부가 자기의 私見을 고집함 … 起案에 參預하는 屬官 등을 조종하여 그 私見을 주입함 … 소위 각 방면의 권위를 망라하였다는 조사위원의 인선에 대해서도 상당한 비난과 불만이 있는 모양이다. 그 이유로 든 바를 聞하면 조사위원 14명에 内地人인 통역관 3인, 대학교수 2인을 제외한 조선인 위원 9명 중 7인까지는 擧皆 조선어연구회라는 동일한 단체에 속한 자여서 이름은 비록 각 방면을 망라한 위원회라 할지라도 사실에 있어서는 조선어연구회의 一分室에 불과한 점이 있다 한다. 조선어연구회원이라 하는 이상에는 물론 철자법에 대한 연구와 소양이 많은 자라 할 것이다. 그러나 今日 언문에 대한 연구와 소양이 심오한 자는 반드시 저 조선어연구회원에만 한한 것은 아닐 것이다. … 頭數는 비록 위원의 태반을 점하였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일파를 대변하는 一人에 불과한 바이다. 다수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하물며 의견을 교환하였음에 불과한 위원회의 경과에 대하여 다수 可決을 見하였다고 吹聽하는 所爲에 이르러서이랴.(《철

---

의 언문철자법은 기본 표기 원칙의 차이가 매우 크다. 전자가 전통적/관습적 표기를 중시했다면 후자는 조선어학회의 ‘형태음소적 표기’를 원칙으로 삼았다. 이때의 형태음소적 표기란, ‘꽃이, 꽃도’처럼 어간과 어미의 기본형을 밝혀 적는 방식을 말한다(정승철 2005: 89-91).

- 26) 이 사실은 1925년 8월 25일과 27~31일, 총 6회 연재되었다. 이를 쓴 사람은 당시의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수관 玄櫛(1880~1938) 또는 매일신보 편집국장 金尙會(1890~1962)로 추정된다. 그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실제 필자는 ‘김상회’보다 ‘현현’일 가능성이 더 높다. 현현은 경성여고보 교원으로서 1921년의 언문철자법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1930년에 언문철자법을 제정할 때는 총독부 편수관으로 기초안 작성에서부터 깊게 관여하였다.

자법 개정 문제에 대하여)(1), 《매일신보》 1929. 8. 25)

위 사실에서는 언문철자법 조사위원회 회의 자료로서의 철자법 원안이 유출되었다는<sup>27)</sup> 사실, 그리고 조사위원 중에 ‘조선어학회’(원문에는 ‘조선어연구회’) 회원이 7명이며 수적 우세를 통해 자신들의 철자법안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결론적으로, 독선적이면서 공평치 못한 위원회 구성이 되었다는 말이다.

이에 반해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수서기로 ‘언문철자법(1930)’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李源圭(1890~1942)는<sup>28)</sup> 이와 다른 의견을 개진하였다.

(9) 大正 11년(1921)의 언문철자법 調査會의 심의의 결과는 하등의 일치점을 얻지 못하고 가장 중대한 문제는 모두 종전대로 즉 明治 45년(1912)에 제정한 그대로 사용하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 항상 일반의 취향과 실제 교수자의 의견과 사계 연구가의 노력과 신문·잡지 등의 태도 등에 주의하여 本府에서 채용한 철자법에 비취 보았었습니다. … 원안 외에 또 무슨 別案이 있었느냐는 말씀입니까. 위원 각위의 의견을 존중히 하여 정리안을 작성하여 다시 심의하였으나 내용을 말씀할 수 없습니다.(《조선문 철자법 조사에 관한 경과 및 정리에 대한 私見》, 《신민》 52호, 87-88면)

27) 《동아일보》(1929. 6. 14/19/21, 총 3회)에는 〈改訂기로 討議된 朝鮮語綴字法〉, 《조선일보》(1929. 6. 15/16/18~20, 총 5회)에는 〈朝鮮語綴字法改正-委員會에 提出한 原案〉이란 제목으로 ‘원안’이 공개되었다(三ツ井崇 2001: 87). 《신민》 52호(1929. 8. 55-60면)에도 〈朝鮮語綴字法改正原案〉이란 제목으로 그 전문이 실렸다.

28) 이원규는 경성고보(1910, 현재의 경기고등학교) 및 경성고보 임시교원양성소(1912)를 졸업한 뒤 각급 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1923년 3월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수와 편수서기가 되었다. 1921년 4월초에 언문철자법 개정안(종전의 표기 관습을 따른 규정)이 발표되자 《매일신보》(1921. 4. 21~22)에 총 2회에 걸쳐, 실제 교육자의 처지에서 이를 비판하는 글(《언문철자 개정안에 대하여》)을 써 기고하였다. 아마도 그는, 주시경의 직계 제자는 아니나 그 계열에 속하는 국어 연구자 김희상(1887~1940)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金熙祥 씨의 談을 讀하고 무한한 찬성과 심심한 共鳴을 이기지 못하였도다(《매일신보》 1921. 4. 21). 이원규는 조선총독부 관리로서 1926년에,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 기념사업(조선어학회 주최)의 실행위원이 되는데 그 이후 학회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총독부에서 조선어학회의 철자 원칙을 기초로 ‘언문철자법(1930)’을 제정하게 하는 데 실무적으로 크게 기여한 인물로 판단된다.

1921년의 언문철자법 시행 이후, 두 철자법안이<sup>29)</sup> 대립하게 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인’과 ‘교육계, 학계, 언론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실태 조사를 하고 나서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위의 두 글을 참조하면서 ‘언문철자법(1930)’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기간	사건	해당 시안의 주요 내용
1928.8~9	학무국에서 ‘기초안’ 작성 <sup>30)</sup>	▷한자음: 실제 발음대로 표기 ▷종성: 종전의 관습(7종성)대로 표기
1928.9.28~ 1929.1.22	학무국 위원들과 <sup>31)</sup> 현직 교원 네 명이 참여하여 ‘원안’ 작성	▷한자음: 실제 발음대로 표기 ▷종성: 기존의 7종성에 ‘ㄷ, ㅌ, ㅊ, ㅍ’ 종성을 추가하여 표기
1929.5.30	언문철자법 조사회 개최 ‘원안’ 검토	
1929.6	일부 신문에 ‘원안’ 유출	
1929.7	‘정리안’ 작성 <sup>32)</sup>	▷한자음: 실제 발음대로 표기 ▷종성: 거의 모든 초성을 종성으로 표기
1929.7.22	언문철자법 조사회 종료	
1930.2	학무국에서 ‘절충안’ 작성	▷한자음: 실제 발음대로 표기 ▷종성: 거의 모든 초성을 종성으로 표기
1930.2.12	중추원 심의	
1930.4	‘개정안’ 시행 및 교과서 인쇄	▷한자음: 실제 발음대로 표기 ▷종성: 거의 모든 초성을 종성으로 표기

29) 이는 ‘전통적/관습적 표기’에 바탕을 둔 기존 철자법안과 ‘형태음소적 표기’에 바탕을 둔 조선어학회의 철자법안을 가리킨다.

30) 《매일신보》의 기사 〈篤學者를 모도혀 조선문 통일 계획 철자법 조사위원회를 설치〉(1928. 8. 13)와 〈언문철자 기본조사 실행에 위탁〉(1928. 9. 11), 《동아일보》의 〈철자법 改訂 문제-조선어독본 개정 문데〉(1928. 9. 27) 등 참조.

31) 稻垣茂一(편집과장), 현현(편수관), 이원규(편수서기), 田島泰秀(편수서기), 小倉進平(경성제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三ツ井崇 2001: 82).

첫째, 한자음을 실제 발음대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었다.<sup>33)</sup> 둘째, ‘기초안’은 종성 표기에서 기존의 철자법안을 따랐다. 셋째, ‘원안’은 ‘ㄷ, ㅌ, ㅈ, ㅊ, ㅍ’ 받침을 추가로 허용하는 등 기존의 철자법안을 약간 수정하였다. 이는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넷째, 위원회의 심의 기간 중에 ‘원안’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안’에 크게 반대한 위원이 이를 외부에<sup>34)</sup> 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다섯째, ‘정리안’은 조선어학회의 철자 원칙을 따랐다. 이는 위원회의 다수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다. 여섯째, ‘원안’ 및 ‘정리안’을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발표되었다.<sup>35)</sup> 일곱째, 언문철자법 조사위원회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료하였다. 그리하여 학무국에서 ‘절충안’을 만들었다. 여덟째, ‘절충안’은 사실상, 조선어학회의 철자 원칙을 따른 것이었다.<sup>36)</sup> 아홉째, ‘절충안’에 반

- 
- 32) 三ツ井崇(2001: 79-80)에서는 이 ‘정리안’(金澤庄三郎 소장)을 소개한 뒤, 학무국의 “改正基礎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하지만 위에 인용한 이원규의 글(9)를 참조하면 이는, 언문철자법 회의에서 제시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최종 심의에 부친 철자법안이었다. 《매일신보》의 사설(8)에서 조선어학회 인사들이 “다수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다수 可決을 見하였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정리안의 존재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3) 이는 1926년부터 출간 한자음의 현실화를 주장해 온 조선어학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당시 한국 사회에 ‘현실 한자음 표기’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매우 강력했음(정승철 2007: 87-90)을 알 수 있다.
- 34) 이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다. 이 두 신문은 조선어학회의 철자 원칙을 강력히 지지하던 언론 매체였으므로 원안의 유출에는 조선어학회 회원(조사위원)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으로써 원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사회적으로 불러일으키고자 했으리라.
- 35) 대표적인 것만 들면 다음과 같다. 《조선사상통신》(1929. 7. 3~26, 총 21회)의 여론 조사(〈총독부의 조선문 철자법 개정안을 보고〉)는 대체로 ‘원안’에 반대한 것, 《신민》 52호(1929. 8. 1, 철자법 개정 특집)와 《중외일보》(1929. 8. 17~9. 25, 총 32회)의 여론 조사(〈한글마침법 시바-본사의 문의에 대한 실체가 제씨의 의견〉)은 ‘원안’에 반대하면서 ‘정리안’(사실상, 조선어학회의 철자법안)을 지지한 것이고 《매일신보》(1929. 8. 25~31)의 사설(〈철자법 개정 문제에 대하여〉)은 조선어학회의 철자법안(결과적으로 ‘정리안’)을 아예 반대한 것이다.
- 36) 《매일신보》(1930. 2. 7) 기사(〈언문철자에 관하여 중추원측 의견 청구-시기의 급



대하는 의견이 있어 중추원 심의에 부쳤다.<sup>37)</sup> 열째, 조선총독부에서는 중추원의 심의 결과에 관계없이 ‘절충안’을 최종 ‘개정안’으로 하여 이를 공포하고 시행하였다. 결국, ‘언문철자법(1930)’은 조선어학회의 철자법안에 기초한 철자 규정이 되었다.

요약건대, 언문철자법(1930)의 제정 과정에서 표기의 기본 원칙이 전통적/관습적 표기 중심(‘기초안’)에서 형태음소적 표기 중심(‘절충안’)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언문철자법 조사위원회에 조선어학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게 된 데에서 비롯하였다. 조선어학회 회원 다수가 조사위원으로 선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표기 원칙의 수정이 가능해졌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조선총독부(학무국)에서 어떤 사회적 요청에 따라 언문철자법 조사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을 선정하였는지<sup>38)</sup>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결국, 1930년의 언문철자법에서 표기 원칙이 변경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작업의 하나가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언문철자법(1930) 제정

---

을 생각하고 원안에 찬동할 듯))에, 조선어학회의 철자법안을 약간 수정하여 ‘절충안’을 만들었다는 진술이 보인다; 작년 개정 위원회에서 議論이 두 파로 갈리어 ... 이번 학무국에서는 兩案을 절충한 새로운 案을 만들었다. 同案의 일례를 들면 초성을 전부 종성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으나 조선 古語에 조예가 깊은 城大의 小倉 박사와 또 金澤 박사 등의 의견을 존중하여 성음학상 몇 가지는 보류하게 된 것.

- 37) 중추원의 자문위원 다수가 절충안에 찬성하여 결과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았다. 중추원 심의 과정에 대해서는 미쓰이(2013: 171-175) 참조.
- 38) 우연일지 모르나, 학무국 측의 실무자 ‘이원규’와 ‘현현’ 그리고 조선어학회 측의 주요 인사 ‘최현배’가 모두 ‘경성고보(현재의 경기고등학교)’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점도 흥미롭다. 이원규(1890~1942)는 1910년에 경성고보를 졸업했으며 최현배(1894~1970)는 1910년에 입학, 1915년에 졸업하였다. 그리고 현현(1880~1938)은 1911년에서 1914년까지 이 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이러한 학맥이 조사위원 선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것 같지는 않으나 적어도 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신민》의 발행자 이각종(1888~1968)도 ‘경기고보’의 전신인 관립한성고등학교(1904~1909) 출신이며 1921년과 1930년에 언문철자법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小倉進平(1882~1944)도 1911년에서 1919년 사이에는 경성고보 교원(총독부 학무국 편집과 편수서기 겸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보면 언문철자법(1930)과 《신민》 그리고 조선어학회의 중심인물들이 ‘경성고보’를 매개로 연을 맺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학무국 측의 실무를 맡은 이원규의 글을 좀더 살펴보자.

- (10) 우리는 그 후 항상 일반의 취향과 실제 교수자의 의견과 사계 연구가의 노력과 신문·잡지 등의 태도 등에 주의하여 本府에서 채용한 철자법에 비취 보았었습니다. … 이 (중성) 문제로 말하면 일반 전문가의 의견들은 일치하게 초성 전부를 중성으로 復用하지는 주장입니다. 실제 교육가의 의견으로 말하더라도 연래에 초등·중등 정도의 교원 諸氏의 조선어 담입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결과, 초등 정도에 있어서는 대개 1/3 가량이 중성을 늘리자는 의견이었고 중등 정도의 교원들은 7-8할 가량이 중성 전부 사용하지는 의견이었으며 … 조선어연구회에서는 자기네들의 연구한 비를 실현하기 위하여 時時로 강습을 열기도 하고 한글이란 전문 잡지를 간행해서 정리·보급에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광, 신생, 한빛, 불교’ 그 외의 幾個의 소년 잡지들이 솔선해서 선전·보급을 실행·노력하는 중 … 그것이 근간에 와서 총독부 학무국 주최로 철자법 개정 조사회를 열지 아니치 못하게 한 大勢인 줄로 思惟합니다. (〈조선문 철자법 조사에 관한 경과 및 정리에 대한 私見〉, 《신민》 52호, 87-88면)

위의 글은, 다소 편향적 시각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기존 철자법에 대한 불만이 언문철자법 개정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나아가 조선어학회 인사들의 연구 활동과 강연,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나 ‘동광, 신생, 한빛, 불교’<sup>39)</sup> 등 민족주의 진영의 언론 매체를 통해 조선어학회의 철자 원칙이 선전·보급되고 그 결과로서, 이른바 ‘철자법 논쟁’에서 학회의 철자법안이 우위를 점차 확보해 갔음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철자법 문제에 기울인 민족주의 계열의 개인 및 단체의 노력이 언문철자법 조사회를 개최하게 하는 한편, 그로 인해 조선어학회 인사들이 해당 조사회 위원으로 다수 참여하게 되는 계기(결국, 언문철자법의 철자 원칙이 바뀌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신민》은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것이 민족주의 계열에 속하는 언론 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

39) 주요한(1900~1979)이 발행한 《동광》(1926~1933), 기독교계의 《신생》(1928~1934), 이윤재가 주관한 《한빛》(1928. 1~8), 불교계의 《불교》(1924~1944) 등은 모두, 당시에는 민족주의 계열의 잡지였다. 1920년대를 대표하는 민족주의 잡지로서 천도교 계통의 《개벽》은 1926년 8월에 이미 폐간되었다.

선어학회 인사들이 《신민》의 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철자법의 보급에서 민족주의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하나로 이해된다.<sup>40)</sup>

아울러 《신민》은 지방민을 주 독자층으로 하였으므로 조선어학회의 지역적 편중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신민》이 지방의 지식인이나 관료를 대상으로 한 설득과 계몽에 중점을 둔 잡지였다는 사실은, 조선어학회가 내세운 철자법안의 공적 지위를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테면 조선어학회는 《신민》에의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철자법안의 전국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셈이다. 이러한 목표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어학회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여 언문철자법(1930)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 V. 맺음말

일제 강점의 시기, 어문 정리는 민족 운동(실력 양성)의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였다. 민족 자강을 위해서는 민족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의사소통 수단의 정비와 통일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당시의 어문민족주의자들은 효율적인 어문 정리의 방법이 무엇일지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그 결과로서 조선어학회는 자신들의 철자법안이 효율적인 어문 정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실력 양성을 위한 민족 운동에서 ‘교과서’는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을 계몽하는 일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훨씬 수월했다. 그러므로 조선어학회 인사들은 자신들의 철자법안이 교과서 언어로 채택되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 그들은 조선총독부의 언문철자법 제

40) 조선어학회 인사들이 원고를 《신민》에 게재한 것은 1930년 8월에 간행된 60호 까지다. 어문 관련 논설로만 한정하면 1929년 8월호(52호)가 마지막이다. 공교롭게도, 언문철자법(1930)의 시행 이후에는 조선어학회가 《신민》의 간행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신민》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언문철자법의 개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본고의 주장을 지지한다.

정에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전제로서 자신들이 내세운 철자법안의 사회적 우위를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조선어학회는 자신들의 철자 원칙을 일반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어문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을 뿐 아니라, 원고 게재와 강연을 통해 자신들의 철자법안을 일반인들에게 설명·보급하는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개벽’이나 ‘동광’ 등 민족진영의 언론매체는 조선어학회의 그러한 활동에 든든한 원군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어학회의 철자법안은 민족계 편향이라는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나아가 지역적 편중과 사적 영역을 넘어 범사회적으로 인정받을 필요도 있었다. 이를 위해 조선어학회는 총독부와 친숙한 관계를 유지해온 잡지 《신민》을 선택하였다. 이념적으로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지방민 및 공직자를 주 독자층으로 한 《신민》은 당시에 범사회성을 보장하는 대표적 언론매체의 하나였다. 그러한 까닭에 조선어학회 인사들은 《신민》의 간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좀더 넓은 영역에서 조선어학회의 철자법안이 긍정적 평가를 받음에 따라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언문철자법(1930) 조사위원회에 다수의 조선어학회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98), 《한국 어문운동과 근대화》, 탑출판사.
- 金敏洙(1984), 《國語政策論》(재판), 탑출판사.
- 金敏洙·河東鎬·高永根 편(1977~1986), 《歷代韓國國文大系》, 탑출판사.
- 金允經(1938), 《韓國文字及語學史》, 조선기념도서출판관.3판; 진학출판협회, 1946]
- 김 철(2005), 갱생(更生)의 도(道) 혹은 미로(迷路): 최현배의 『朝鮮民族更生의 道』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28, 306-351.
- 미쓰이 다카시(2013), 《식민지 조선의 언어 지배 구조 - 조선어 규범화 문제를 중심으로》(임경화·고영진 옮김), 소명출판.
-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 朴晷義(1970), 日帝下の 言語·文字政策, 《日帝下の 韓國研究叢書》 1(일제의 문화침탈사), 민중서관, 189-370.
- 송철의(2004), 한국 근대 초기의 어문운동과 어문정책, 《한국문화》 33, 1-35.
- 시정근(2015), 《훈민정음을 사랑한 변호사 박승빈》, 박이정.
- 申昌淳(2003), 《國語近代表記法の 展開》, 태학사.
- 이경돈(2011), 신민(新民)의 신민(臣民), 《상허학보》 32, 275-311.
- 李基文(1970), 《開化期の 國文研究》, 일조각.
- 李秉根(1986), 開化期の 語文政策과 表記法 問題, 《국어생활》 4, 24-45.
- 정승철(2005), 근대국어학과 주시경, 《한국 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학》(이병근 외), 서울대 출판부, 77-138.
- \_\_\_\_\_ (2007), 일제강점기의 언어 정책 - 언문철자법을 중심으로, 《일제 식민지 시기 한국의 언어와 문학》(이병근 외), 서울대 출판부, 69-93.
- \_\_\_\_\_ (2009), 어문 민족주의와 표준어의 정립, 《인문논총》(경남대), 159-180.
- 정승철·최형용(2015), 《안학의 국어 연구》, 박이정.
- 정진석(2014), 《한국 잡지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태린(1998), 일제시대의 언어정책과 언어운동에 관한 연구 - 언어관 및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석사논문(연세대).
- 최경봉(2006),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활동의 역사적 의미, 《민족문화사연구》 31, 408-433.

三ツ井崇(2001), 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言語支配の構造 - 朝鮮語規範化問題を中心に, 博士論文(一橋大學 社會學研究科).